

강원지사 후보 (최문순, 정창수)

3대 핵심공약 및 5대 주요 분야 정책평가

【경실련 공약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노상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인길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국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최예지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 -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고 실현가능한가? -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자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정책공약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공약의 개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 평가표

후보명	구분	공약명
최문순 (더불어민주당)	제1공약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제2공약	아이 낳으면 월 70만원씩
	제3공약	어르신 일자리 확대, 청년 일자리 수당
정창수 (자유한국당)	제1공약	춘천 내수면 마리나 리조트
	제2공약	원주 스마트시티 조성 및 미세먼지 대책
	제3공약	강릉·평창 4계절 종합휴양관광지 조성

【총평 - 3대 핵심공약】

1) 종합 평가

- 최문순(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강원도가 처해 있는 현실과 남북관계의 화해 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저출산과 청년 취업 문제,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후보자의 독창적이고 개혁적인 공약은 아님.
- 그리고 핵심 공약의 내용상 로드맵과 재원 및 재원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내용도 부족함.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약이 없는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임.
- 동해선 연결은 국가적 사업으로 이 사업을 강원도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제1핵심공약으로 삼은 점은 이해하기 어려움. 강원도가 직접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남북평화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공약화 하는 것이 필요함.
- 아동, 청년, 노인층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는 그 효과가 가계에 직접 미친다는 점에서 확대가 바람직함. 특히 육아휴직자에 대한 12개월의 추가 양육수당 지원은 관련 법령 정비라는 과제가 있기는 하나, 실제 육아휴직으로 가계수입이 줄어들어 양육 부담이 커지는 부분을 이해하고 일정부분이라도 해소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다만 청년층 취업 지원 사업은 지역 기업 육성 정책과 병행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반감함은 물론 퍼주기 논란도 계속될 수 있음.
- 노인일자리 역시 지원 대상 숫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와 함께 구직자 입장에서 보다 질 좋은 일자리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 입장에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효과가 보다 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
-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강원도의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함에도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의 규모만 적시할 뿐 구체적 재원확보 계획이 미비하다는 것임. 재정상황에 따라 추진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득표에 유리한 공(空)약이 될 수 있음.

○ 레고랜드테마파크 사업이 투자유치에 실패하며 7년째 표류하고 있음에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호도해 왔으며, 투자유치 실패, 특수목적법인 참여사의 자본금 납입 거부, 부실한 경제성평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배임-횡령 등 불법 문제, 도유지 헐값매각 문제, 역사유적 훼손 문제, PF대출의 절차적 하자 등등 셀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의 질문에 대하여 가짜뉴스로 표현함.

○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건설을 위해 멀린사가 직접 투자할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으나, 멀린사는 기존 시설 건설 이외에 부지조성을 위한 추가 투자를 이사회를 통해 승인한 바가 없음. 그럼에도 4번째 착공식을 진행하여 도민을 호도하고 선거방송에서도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음.

■ **정창수(자유한국당) 후보**는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이고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한 전문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공약으로 볼 수 있으나, 강원도지사 후보자의 공약으로는 너무 지역에 한정된 공약만을 제시하고 있음.

○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와 로드맵, 재원 확보와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지 않음.

○ 다른 공약도 있겠지만 핵심공약 3개 모두 개발과 관련된 공약임. 강원도가 처해 있는 여러 이슈들 중에서 대응해야할 공약들이 많음에도 개발 공약만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전문적인 분야를 너무 지나치게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듦. 핵심공약으로 보았을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공약임.

○ 지역현안에 대하여 그리고 지역의 비전에 대하여 얼마나 고민해 왔는지가 보이지 않음. 누구나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도지사 후보자 캠프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고민한 결과 내놓은 3대 핵심 공약이라 보기 매우 어려움.

○ 구체적인 사업 로드맵이나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직이 아니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최소한 핵심공약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이라도 담으려 노력해야 하는데도 전무하다는 것은 후보자든 후보자 캠프든 정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반증으로 여겨질 수 있음. 각 핵심공약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임.

2) 후보별 평가

■ 최문순(더불어민주당) 후보

제1핵심공약 : 동해 북부선(강릉-제진)
○ 절차없이 바로 착공

1) 구체성 평가

- 후보자가 밝힌 제1핵심공약은 단일 공약으로 세부 공약(세부실행 프로그램)이 없음(후보자의 답변도 같음). 그리고 제1핵심공약은 4·27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동해선이 포함되어 있고, 향후 한반도 종단철도와 연결될 경우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통해 유라시아 진출 교통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고, 전체 예산규모도 밝히고 있음. 특히 전체 예산은 100% 국비로 한다고 되어 있음. 국비 100%예산이고 이미 4·27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면 강원도지사 후보의 공약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중의 하나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임.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여부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4호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데, 동 규정에 해당되는지는 의문임. 그런데도 이를 예타없이 곧바로 설계용역에 착수하는 것은 재정집행의 위법성 논란이 될 수 있음. 참고로 동조 제1항 1호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명문화하고 있음.
- 제1핵심공약이 최문순 후보자의 핵심공약이라면,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강원도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인력과 조직의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1핵심공약을 지금과 같이 강원도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내용과 성의도 없이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 개혁성 평가

- 동해선 연결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강원도 입장에서라도 평화체제구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환영할 일임.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중 환동해경제벨트의 핵심 축으로서 동해선 연결을 추진하는 것.
- 국가 정책이지 강원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사업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 제1핵심공약은 최문순 후보자의 핵심공약인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중앙정부가 추진할 정책인지를 엄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임.
- 남북평화구축을 위해 동해선이 연결되는 등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이 마련되는 상황에서 교류 활성화를 통해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워야 함.
-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차원의 사업을 그대로 도용한 것으로 매우 불성실한 공약임.
- 한반도 신경제지도, 환동해경제벨트는 중앙정부의 구상인바, 지자체의 핵심공약으로 보기 어렵고 개혁적인 사업 또한 아님. 다른 측면에서는 동해선연결이 상징성만 있는 개발공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임.

3) 적실성 평가

- 향후 한반도 정세와 정치적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적실성 있는 사업임. 강원도 도민들의 교통 이동의 편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실성 있는 정책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 최근 남북정상회담 등의 평화분위기에 따른 동해안철도 연결은 사업성을 떠나 필요할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임. 그렇다하여 법적절차를 무시해서는 아니됨.

- 만약 신속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먼저 강구되어야 할 것임.

제2핵심공약 : 아이 낳으면 월 70만원씩
○ 아동수당 월 50만원(72개월)
○ 육아전업수당 월 20만원(12개월)

1) 구체성 평가

- 제2핵심공약은 강원지역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가 특히 심각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지원 사업이 더욱 절실한 상황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약임. 하지만 제2핵심공약의 세부 실행 프로그램이 없음(공약집을 보면 제1핵심공약의 내용에 있는 것이 그래도 복사해서 들어가 있음. 상당히 성의가 없는 부분임).
-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음. 2018년도에 법제도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도 하반기에 과연 법제도가 정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강원도 자체의 제도적 정비인지 아니면 조례 개정 및 제정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 예산은 아동수당 5년간 소요 예산, 육아전업 수당 5년간 소요예산을 밝히고 있음. 하지만 2019년의 아동이 몇 명인지 그리고 2019년 이후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막연히 예산만 증액해 둔 상태임. 예산이 해마다 증액된다는 것은 아이가 그 만큼 더 태어난다는 것인데, 출생아 수에 대한 추계가 없음. 육아전담수당도 마찬가지임. 예산 소요 추정치의 구체성이 없음.
- 그리고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50%씩 인데, 이는 추후 시군의 예산과 관련하여 상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시군도 자체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을 것인데, 여기에 도비와 매칭으로 시군 예산을 투입하려면 그 만큼 예산 소요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것이 없음.
-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도 2018년도부터 도비와 시군비 각 각 50%씩 4년 동안

제시한 것도 구체적이지 않은 것임.

- 제2핵심공약은 세부실행프로그램도 제시하지 않고(제1핵심공약을 그대로 복사해 놓음), 도비와 시군비 매칭으로 추진한다고 해 놓은 것, 아동수당과 육아전업수당의 소요예산에 대한 출산률과 아동 수 증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함.

2) 개혁성 평가

- 본 공약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임. 하지만 강원도도 저출산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거나 대응해야 할 주체임. 하지만 본 공약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아동 출산의 추계와 예산의 추계도 명확하게 분석하여 밝혀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
- 하지만 아이를 출산하거나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강원도민의 어려움을 들 수 있는 공약임.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으로 보임. 어느 후보자라도 대처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고려하여 개혁성은 보통으로 평가함.
- 맞벌이 가구에서 주 양육자 1인이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가계소득이 감소하여 출산과 육아에 부담이 가중되는데, 이런 부담을 지방정부가 함께 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함. 특히 육아휴직 중인 가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그러한 출산 문제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금 지급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는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임. 교육이나 주거 등 다양한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문제가 저출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저출산에 대한 종합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됨.

3) 적실성 평가

- 강원도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임. 강원도민과 강원도 광역정부가 마땅히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의제임.
- 출산 가구에 직접 도움이 되는 공약으로 관련 요구 역시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 공약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계획이 결과 치만 보여주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계획,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법 미비 탓, 지자체 협의 탓으로 지연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음.

제3핵심공약 : 어르신 일자리 확대, 청년 일자리 수당
○ 어르신 일자리 연 4만개 ○ 청년 일자리 수당 현재 월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최대 3개월)

1) 구체성 평가

- 제2핵심공약은 저출산 대책 공약이라면, 제3핵심공약은 청년실업과 고령화 대책 공약이라 할 수 있음. 제3핵심공약을 위한 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음. 그 내용은 고령층 일자리 확대 및 제공과 청년 취업 지원임. 공약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도무지 어떤 일자리를 제공할겠다는 것인지 전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음.
- 청년세대의 취업 의지 확대, 취업 준비과정에서의 가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직접 지원 사업으로 수혜자에 즉각적 효과를 줄 수 있음. 청년 일자리 수당은 현재 월 30만원에서 60만으로 인상하는 것임. 현재의 강원도 정책을 지원액을 높이는 것으로 조정된 것임. 그렇다면 현재 보다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재원마련 대책의 내용은 대략적인 것임.
- 일할 수 있는 노인세대의 소득 확대를 위해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필요함. 어르신 일자리 4만개 제공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4만개를 창출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음. 강원도 예산을 투입하여 한정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면 사실상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아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 어르신 연 일자리 4만개 창출에 필요한 예산도 국비와 도비 및 시군비가 함께 들어가는 것임. 도비는 20%만 들어가는 것임. 이렇다면 과연 강원도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현직 도지사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

2) 개혁성 평가

- 공약이 실현된다면 강원도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음. 특히 청년과 고령층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임. 구직자 지원 사업은 좋은 기업의 도내 유치 및 육성 등이 병행되어야 더욱 실효성이 있음.
- 하지만 청년 취업 지원은 현재의 지원 액수를 상향 조정한 것이고, 어르신 일자리 4만개 창출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국가적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히 대응해야할 도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개혁성이 높은 공약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3) 적실성 평가

- 강원도민의 욕구를 반영한 공약으로 보임. 지난 4년간 최문순 후보가 추진해 온 청년 취업 지원의 경우, 지원 액수를 상향 조정한 것임. 강원도의 예산이 더 이상 동계올림픽 등에 들어가는 비용(물론 향후 추가적인 관리 비용 등이 들어갈 것임)을 줄이면 가능한 것임.
- 어르신 일자리 창출은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것이고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당연히 대응해야할 이슈임을 고려하면 적실성은 있으나 높게 평가할 수 없는 공약임.
-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담아낼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 지원 확대는 바람직하나 강원도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있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언젠가 후퇴할 수 있음.

■ 정창수(자유한국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춘천 내수면 마리나 리조트

- 친환경 전기 동력원을 이용한 복합형 내수면 마리나 리조트 개발
- 수자원 오염을 최소화하고, 친수공원과 마리나 계류장 설치
- 수상레포츠 교육시설, 수변 생태 관광시설, 스포츠 체험시설 운영
- 호텔·놀이시설·지역축제 등 연계한 관련 산업 육성

1) 구체성 평가

- 제1핵심공약은 춘천시와 관련된 공약임. 춘천 내수면 마리나 리조트에 대한 공약임. 춘천시에 한정된 공약임. 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사업 대상지와 사업기간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리조트 개발에서 나올 법한 일반적인 내용을 나열한 수준임.
- 4년간 로드맵과 예산도 밝히지 않음. 그러므로 제1핵심공약 자체가 4년 임기 내에 완결될 수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기 힘들고, 재원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평가할 수 없는 공약임.
- 친환경 전기 동력원을 이용해 리조트를 개발하겠다고 하나 수자원 오염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있음

2) 개혁성 평가

- 자연생태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개발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 등 지역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나, 최문순 후보가 강원도지사로서 7년간 추진해 온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이 지금까지 성과가 없고 여러 문제들만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안으로 주장하는 공약임.
-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로드맵), 예산계획, 재원조달 계획이 없고, 모호한 구호에 불과함.

3) 적실성 평가

- 춘천에 한정된 공약이어서 강원도지사 후보 공약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드

는 공약임. 그리고 4년 임기 내에 완결될 수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기 힘들고, 재원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평가할 수 없음.

- 세계적 친환경 리조트 건설을 지향하고 있으나, 특징이 비슷한 다른 수변리조트와의 차별성과 경쟁력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

제2핵심공약 : 원주 스마트시티 조성 및 미세먼지 대책

- 원주 전역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권 분류 및 관련 사업 수행
- 버스정보시스템(BIS) 전면 확대, 도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사물인터넷 구축, 사회약자 및 소외계층 보호 시스템 도입, 4차 산업과 우량기업 유치, 미세먼지 측정 및 R&D 연구기능 강화, 도시재생 사업, 스마트팜 등 세부사업 운영
- 지평-남원주간 수도권 전철과 여주-원주 복선철도 조기 사업 수행

1) 구체성 평가

- 제2핵심공약은 원주시와 관련된 공약임. 원주 전역 스마트 시티 조성 및 미세먼지와 관련된 공약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공약의 주된 내용은 원주에 한정된 공약임. 공공기관 직원들의 낮은 정착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시티 건설이 대안인가에 대한 근거 제시 필요함.
- 다만 미세먼지 대책은 원주시에 한정된 공약이 아님. 두 개의 공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세부 실행프로그램에는 원주 스마트 시티 조성과 관련된 공약만 있음.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은 없음.
- 4년간 로드맵과 재원 마련 등 예산도 밝히지 않음. 예산 배분 계획도 밝히지 않음. 그러므로 제2핵심공약도 자체가 4년 임기 내에 완결될 수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기 힘들고, 재원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평가할 수 없는 공약임.

2) 개혁성 평가

- 도 차원에서 도내 주요 도시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는 하나 본 공약은 원주 지역 핵심 사업일 뿐 강원도의 핵심 사업이라 보기 어려움.(원주 시장의 공

약에 가까움)

- 신도시건설은 구도시의 쇠퇴와 침체를 가속하여 지역불균형 현상을 가속화함. 스마트시티 조성으로 발생하는 신도시와 구도시의 발전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방안 제시 필요.
- 특정 도시에 대한 공약을 핵심공약으로 한다면 타 주요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함.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원주에만 맞는 사업도 아니고 타 도시에도 필요한 사업들이기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음.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예산계획도, 재원확보 방안도 없음.

3) 적실성 평가

- 원주천에 한정된 공약이어서 강원도지사 후보 공약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공약임. 그리고 4년 임기 내에 완결될 수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기 힘들고, 재원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평가할 수 없음.
-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미세먼지 측정과 연구기능 강화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신도시의 중복 투자로 지역간 발전 격차 심화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임.

제3핵심공약 : 강릉·평창 4계절 종합휴양관광지 조성

- 강릉·평창권의 올림픽 유산과 기존 관광자원의 휴양·체험 명소화
- 강릉·평창권의 연계형 휴양·체험 관광로드의 개발과 관광 벨트화
- 강릉·평창권 4계절 휴양관광자원의 분류와 국내외 기자단 팸투어 및 한국관광공사 31개 해외지사 홍보사업 수행
- 철도·항만·항공·고속도로 등 접근망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사업 수행

1) 구체성 평가

- 제3핵심공약은 강릉과 평창권의 종합 휴양관광지 조성과 관련된 공약임. 공약의 주된 내용은 강릉평창지역권에 한정된 공약임. 세부 실행프로그램은 강릉평창 지역권의 종합휴양 관광지 조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 4년간 로드맵과 재원 마련 등 예산도 밝히지 않음. 예산 배분 계획도 밝히지 않음. 그러므로 제1-2핵심공약과 같이 제3핵심 공약도 4년 임기 내에 완결될 수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기 어려움.
- 예산의 경우, 공공과 민간부분 공동참여 방식 제안했으나 민간의 수익창출을 위한 난개발 방지 대책 등 보완책 마련 필요
-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을 활용한 관광강원 추진 계획에는 일정부분 공감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계획, 예산계획, 재원확보 방안이 없고 모호함. 사업의 타당성, 관광객 유치 인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2) 개혁성 평가

-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하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홍보 프로그램사업의 성격이 커 참신성은 낮음
- 누구나 알고 있는 지역 관광 여건을 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관광벨트 조성 계획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아무런 내용이 없음.
- 기존에 각 기초지자체나 강원도차원에서 추진 중인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조차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적실성 평가

- 강릉 평창권에 한정된 공약이어서 강원도지사 후보 공약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공약임. 그리고 4년 임기 내에 완결될 수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기 힘들고, 재원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평가할 수 없어 적실성도 평가하기 어려움.
- 올림픽 이후 유휴시설을 연계한 관광자원화 사업은 시의적으로 적절함. 다만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추구하고 사유화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5대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

■ 5대 주요 정책질의

분 야	정책질의
1. 재정행정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및 계획
	②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개혁 방향
	③ 소방청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재난안전관리 방안
2. 지역경제 일자리	①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 및 계획
	②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방안
	③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차단 및 내국인노동자 일자리보호 방안
3. 사회복지	①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및 확충 방법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계획
	③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강화 대책
4. 도시·주택	①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대책 및 방안
	②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
	③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 대책과 방안
5. 강원 현안	① 동계올림픽 이후 경기장 활용방안 및 가리왕산 복원계획
	② 강원도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③ 춘천 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입장과 대안
	④ 미시령 터널에 대한 대책

■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세부평가 - 5대 주요 정책분야】

1) 재정·행정 분야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및 계획

■ 최문순 후보

- [정책]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근본적으로 외교와 국방을 뺀 모든 권한이 지역에 이양돼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 및 자치조직권, 인사권 등 실질적 제도의 변혁이 선결돼야 함. 특히 지방재정과 관련,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로서 경제성장률 둔화와 맞물려 세수확보가 한계에 이르고 있음.(2009년~2014년 평균 증가율 : 국세 5.1%, 지방세 2.6%)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경우 과다·장기간 감면이 많아 감면의 고착화·기득권화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013년 감면율은 지방세 23%, 국세 14.3%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행 국세 대 지방세비율인 8대2에서 6대4 수준으로 과감하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 [평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답변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언급하고 있음. 특히 재정분권을 언급함. 국세와 지방세 6대4 비율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학계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을 언급한 수준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강원도의 개혁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음. 무분별한 개발사업, 선심성 사업에 기인한 재정 상황 악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려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점 사업 (레고랜드, 동계올림픽 경기장 활용방안, 가리왕산 복원 등등)들에 대한 즉각적인 점검과 개혁이 필요함.

■ 정창수 후보

- [정책] 강원도의 2018년 시도별 예산규모에서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3.5%로 열악한 수준임(강원도 자체수입은 1조 150억원, 세외수입은 667억원).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전이나 지방세수 증가가 있을 수 있으나, 지방세수 확대의 경우 주민담세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음. 따라서 강원도에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재산세, 취·등록세 등 세수 규모를 늘려가야 함.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부가가치세 배분 비율을 높이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세와 같은 법정외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
- [평가] 국비와 지방세 조정만 언급한 최문순 후보보다는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함. 기업 유치와 인구 증가 방법을 언급하고 있음. 또한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관광세 등을 언급함. 법정외세 도입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보임.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관광세 등이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밝히지 않아 적실성에서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임.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방안은 주민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 하지 않고 있음. 기업유치와 인구증가를 통해 재산세와 취등록세 등의 세수규모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음. 누구나 하는 선언적 이야기로는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는 없음. 무분별한 개발사업이나 선심성 사업에 대한 점검과 개선에 대한 고민은 없음. 현행 제도에서 법정외세를 두는 것 자체도 논란거리이지만 관광 부분에 법정외세를 도입하는 것은 관광업 자체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관광산업을 키우겠다는 강원도의 전략과 상충될 가능성이 큼.

②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개혁 방향

■ 최문순 후보

○ [정책] 강원도 공기업 중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으로 빗더미에 올라앉은 강원개발공사임. 강원개발공사 부채는 현재 약 8,300억 원 정도로 최문순 지사 부임 첫해인 2011년보다 2,500억원 가량 줄어든 수치임. 강원개발공사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펜시아를 적정 가격에 매각해야 함. 이를 위해 동남아 A 기업과 협상 중에 있으며, 머지않아 매각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알펜시아 매각협상이 타결되어 강원개발공사 부채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고 나면 강원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의 재무건전성, 인력 구조 등에 대해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인력 운용을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겠음.

○ [평가] 알펜시아 리조트의 부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과 매각에 집중해서 언급하고 있음. 한 가지 이슈를 묻는 것이 아님에도 강원개발공사의 알펜시아 문제만 언급한 것은 문제임. 강원도 산하 출자기관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못함. 특히 알펜시아 문제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강개공 이외의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평가를 통해 혈세 낭비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는 점에서 불충분한 답변임.

■ 정창수 후보

○ [정책] 답변 없음.

○ [평가] 개혁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 유권자에게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임.

③ 소방청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재난안전 관리 방안

■ 최문순 후보

○ [정책] 현재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관은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처우나 근무환경의 격차가 발생함. 서울이나 경기권의 소방서는 법정 기준을 잘 지키고 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넉넉지 않아 처우나 차종별 법정기준에 맞추기 어려운 상황임. 이런 여건 속에서 지자체에 따라 소방관의 장비, 복지 혜택 등의 차등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강원도민의 안전복지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되었음. 이에 소방 정책의 일률적 발전과 소방직 근무조건을 형평성 등을 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방직을 국가직화한 것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복지, 일자리뿐만 아니라, 소방, 경찰 등 주민의 일상적 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분권화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라고 생각함.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소방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소방장비 확충 등 소방 분야 전반에 걸쳐 국가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면 소방직을 전문직 지방 공무원화하여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평가] ○소방청의 국가직 전환은 이미 예정된 일인데 여기에 대하여 자치분권 차원에서 지방 공무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는 질문에 동떨어진 답변임. 과거 지방직 시절 열악한 소방직의 처우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는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여러 사건에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던 것임. 이에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 국민으로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지역의 재정상황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할 것.

■ 정창수 후보

- [정책] 답변 없음
- [평가]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

2) 지역경제·일자리분야

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 및 계획

■ 최문순 후보

- [정책] 3대 핵심 공약분야와 중복
- [평가] 3대 핵심공약 중 일자리 부분 공약은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뿐임. 이중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취업 준비 지원 및 도내 기업 취업 시 지원하는 내용. 특정계층에 편중된 내용으로 보편적인 일자리 사업 내용이라 보기 어려움. 따라서 사실상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창수 후보

- [정책] 도민들의 생계유지 및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1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현재 강원도의 일자리는 약 75만

4000개에 불과하고 사업체 수 역시 13만 2000개 수준이며 소규모 중소기업의 자영업 형태가 대다수임. 따라서 방문자 경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 기업유치, 지역 연고산업 및 향토기업 육성, 창업지원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수를 85만 4000개로 10만개 이상 확대할 계획임

- [평가] 10만개 일자리 창출과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분야와 방법을 제시함. 다만, 개발 위주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문제임. 강원도의 관광 산업과 기업 유치와 연계한 공약으로 관광과 기업유치는 강원도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 적실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관광객 유치, 기업 유치, 향토기업 육성 등등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나, 지금까지 관련 정책을 펴왔지만 그 효과는 기대 이하인 상황.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원인을 진단,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모호하고 선언적인 이야기만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 아님을 지역 주민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

②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방안

■ 최문순 후보

- [정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 위축을 예방해야 함. 이에 1)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2) 정규직 1인 채용시 600만원 지원 시행으로 영세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자 함.
- [평가]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전액 지원, 정규직 1인 채용 시 600만원 지원과 같은 대책을 제시함. 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 보통으로 평가함. 강원도의 중소 상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재원에 대한 언급이 없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지만 구체적 내용은 없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반적인 지원방안으로 보기 어려움. 가맹사업자들의 경우 가맹 본부의 불공정 갑질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던가, 무분별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상생협약이라던가 하는 미약하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없어 상당히 아쉬움.

■ 정창수 후보

○ **[정책]** 중소기업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10만 8천개와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12만개로 집계되었으며,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20만 6천명 정도이고 중소기업체 종사자수는 37만 7천명 정도 파악됨. 또한 5인 이상 전체 기업체 현황은 전국 98,784개 이며 도내는 1,358개로서 전국대비 1.4%에 해당됨. 이 중에서 도내 5인 이상의 중소기업체는 1,340개로서 98.6%이며 중소기업의 사업체 비중이 매우 높음. 따라서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은 강원도 중소기업 판로 전담기관 설립, 고용환경 개선사업, 전통시장 명소화 사업, 퇴직자의 찾아가는 기업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평가]** 중소기업 판로 전담기관 설립, 전통시장 명소화, 퇴직자의 찾아가는 기업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음. 그동안 논의되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강원지역의 소상공인 중 중소기업의 업체 비중이 높으며,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대책을 이야기 함. 필요한 문제의식이기는 함. 그러나 본 질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것으로 답변 자체가 적절하다 보기 어려움.

③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차단 및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보호 방안

■ 최문순 후보

○ **[정책]** 내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강원도의 건전한 고용문화 확립을 원칙으로 고용상의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먼저 사업주에게 합법적인 고용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건설 사업주에게 합법적인 고용 관련 법률 내용과 절차를 안내,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해야할 것임. ※ 자진출국자 불법체류외국인 입국 금지 완화 시행. 다만,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할 것임.

○ **[평가]** 건전한 고용문화, 합법고용 안내 및 홍보하여 준수토록 감독하겠다는 취지는 이해됨. 하지만 외노자 불법고용은 내국인에게 생존의 문제임이 분명한데, 이를 '고용문화'로 온건하게 치부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안일한 대응임. 금년초 치러진 동계올림픽을 위하여, 지난 몇 년동안 시설사업에 수많은 합법 또는 불법 외노자들이 고용되었을 것인데, 적어도 이들에 대한 조사분석 현안조사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움. 중소기업 일자리 또한 서민일자리이지만,

낮은 임금이 내국인 기피 원인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서민들의 일자리 기피에 대한 원인규명이나 합당한 대책마련없이 외노자를 유일한 대안으로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함. 특히 고용상 불법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고만 언급할 뿐,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감독강화 언급도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정창수 후보

- [정책] 답변 없음.
- [평가] 불법고용은 내국인 서민 일자리가 불법적으로 빼앗기는 것을 의미함. 그런데도 이에 대한 일자리 보호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움.

3) 사회복지 분야

①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및 확충 방법

■ 최문순 후보

- [정책] 강원도의 복지 예산은 1조 4,780억원(2017년 기준)으로 매년 1,000억원 씩 증가해 왔음. 이는 기초(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 제도가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의무지출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이와 별도로 강원도는 아동수당, 육아전업수당, 청년일자리수당 등 인구복지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이에 대한 예산 확충 계획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시스템화, 전산화 등을 통해 연 5%정도의 도 세출예산 절감이 가능하며, 남북관계 개선, 올림픽 계기 SOC 발달, 신산업발전 등을 통해 연 7%정도의 도 세입이 증가할 것임. 더불어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강원도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국비 확보도 점차 증대될 것임. 이러한 재원을 통해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할 수 있음.
- [평가] 아동수당 등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산확충 방법은 다소 추상적인 수준으로 나열되고 있음. 특히 남북관계 개선이나 올림픽 유치로 인한 위상 강화 등은 실제로는 예산확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장으로밖에 볼 수 없음.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그 예산확충의 구체성은 다소 부족함. 3대 핵심공약의 내용과 비슷한 답변을 제시함. 다만 시스템화와 전산화 등을 통한 세출예산 절감을 언급하고 있음. 일하는

방식 등을 통한 예산의 절감과 확충은 바람직한 의견으로 평가함. 남북관계개선과 동계올림픽 효과도 예산확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러나 이는 부차적인 것이고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므로 지속가능성에서는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음. 예산의 절감 방법을 제시한 것, 고령층의 일자리, 저출산 대책, 청년 취업 지원 등에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은 어느 정도 적실성이 있음. 복지 예산의 확충은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다만 국가사무를 대신하는 복지사업은 사실상 강원도의 복지정책이라 보기 어렵고,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남북관계 개선 등의 여건에 따라 세수가 증대하여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근거가 불확실한 예측일 뿐.

■ 정창수 후보

- [정책] 답변 없음.
- [평가] 유권자의 관심분야에 대한 답변 거부는 심각한 문제임.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계획

■ 최문순 후보

- [정책] 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취약계층 원격 진료 : 강원도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임. 게다가 낙후된 공공의료시설,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군지역이 많아 대도시와 비교하여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원주, 삼척시의 공공의료기관을 증·신축하여 지역사회 중심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도농간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분만 취약지역에 분만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내 출산율을 제공함과 동시에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해야 함. 마지막으로 보건기관의 원격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의료 소외지역 주민들의 만성질환 관리로 질병 예방과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 ②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비 월 15만원 지원 :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매일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있으나 출장 경비 미지급 등으로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직무함양 교육 기회 부족으로 종사자별 서비스 수준 상이한 현실임. 따라서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통해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 진작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평가] 강원지역의 대부분이 농산어촌 지역이며 이 때문에 의료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지역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과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 진료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안정적인 노인돌봄 서비스를 위해 종사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임. 특히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지역의 경우 출산을 저하는 물론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켜줘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가 항상 존재하였음. 그러나 구체적인 확충 방안이나 예산계획, 재원확보 방안 등이 빠져 있는 점은 상당히 아쉬움. 이를 보완하여 추진한다면 강원지역 의료복지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창수 후보

○ [정책] 첫째, 사회복지기금 부활로 인도적 차원의 남북강원도 복지교류협력 추진, 둘째 강원도민이 참여하는 지역복지 생태계 구축, 셋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넷째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및 노동여건 개선, 다섯째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실천

○ [평가] 추상적인 답변인 동시에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것을 요약하여 답변한 것임. 내용은 없고 구호만 있음. 지자체 책임성 강화, 지역복지 생태계 구축 등 제시한 내용들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긍정적 평가에 한계가 있음. 사회복지기금의 부활로 남북강원도 복지교류협력 추진하겠다는 것은 질문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한 부분임. 이외에 도민이 참여하는 지역복지 생태계 구축,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등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음

③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강화를 위한 대책

■ 최문순 후보

○ [정책] (노인) 노인일자리 연 4만개 공급: 어르신 일자리 확대·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자리 욕구를 충족해 드리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과제라 할 수 있음. 노인 일자리는 고령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노인 인력의 사회적 가치창출을 도모하는 생산적 복지를 가능하게 함. 또한 자살, 고독사 등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뿐아니라 노인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임.

(영유아) ① 아동수당을 월 50만원으로 대폭 확대 : 한국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인구절벽, 지방 붕괴로 이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인식하고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② 공기청정기 보급, 설치로 미세먼지 없는 어린이집 만들기 : 미세먼지 걱정없는 어린이집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장애인) 장애인광역이동서비스지원센터 설치 : 현재 장애인 이동택시 등은 시군 간 이동이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장애인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도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외국인) ①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로 외국인 농업인력 전담 배치 : 강원도 내 고령농 증가로 농촌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난 해결위한 외국인 농업근로자 확대에 따른 전담 센터가 필요함. 코리아드림을 꿈꾸며 강원도에 정착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농업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고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② 다문화여성농업인 진료비, 건강검진비 지원 : 강원도내 다문화 가정 증가로 다문화 여성이 농업경영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 과중한 노동부담 경감과 복지혜택으로 다문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평가] 노인 일자리 확대는 노인 복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4만개 공급이라는 공약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함. 아동수당 확대는 육아 부담은 지자체가 함께 진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나 재원 마련을 위한 고민이 필요. 미세먼지 대책으로 보육 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기청정기 보급 및 설치 사업은 시의성이 있음. 보다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관리자의 책임 소재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농업분야 종사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상담을 위한 전담 센터 설치 및 인력 배치는 필요한 상황. 다문화여성 농업인 진료비,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계획 역시 의미 있음. 그러나 일부 공약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소요 예산이나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저출산 고령화에 더욱 취약한 강원도의 경우 관련 복지사업의 필요성이 매우 큼.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은 이동권 확보도 중요하나 재활이나 치료를 위한 시설 확충, 교육권 보장 등등 당사자들이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들에 대한 지원 방안 역시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이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다양한 부문에서 복지수요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정창수 후보

- [정책] 강원도는 201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7.2%로 인구비중 20% 이상의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어 도차원에서 우선순위 사업으로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독거노인 자살예방, 사회참여 활동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복지를 강화 하겠음.
- [평가] 실질적인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하나, 대체 무슨 공약이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매우 어려움. 내용이 전혀 없음.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타나 있지 않음.

4) 도시·주택 분야

① 소득 하위 20%이하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대책 및 방안

■ 최문순 후보

- [정책] 효도아파트 공급 확대 : 강원도는 고령인구 비율이 18%를 넘어섰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특히 65세이상 노인(333,062명) 중의 17.6%(58,500명)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심각한 노인 빈곤상태임. 이에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에 생활하기 편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안락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효도아파트 입주에 따른 노인 방문돌봄서비스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노인자살, 고독사 등 고령 사회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궁극적으로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은 노인 빈곤을 예방하고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기본적인 과제라 할 수 있음.
- [평가] 효도아파트 공급 확대는 노인층에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그러나 노인 복지와 연계한 내용이 답변의 전부로 저소득층 일반에 해당하는 관련 공약이라 보기 어려움. 저소득층 전반에 대한 주거안정 로드맵이 없으므로 평가 불가하다 판단함.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효도아파트’라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돌봄서비스 등을 시행하는 것은 노인 주거빈곤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실행방안이 부재임. 3선 도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강원도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음

■ 정창수 후보

- [정책] 답변 없음.
- [평가]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에 대한 고민이 없음.

②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 및 방안

■ 최문순 후보

- [정책]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강원도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임. 기본적으로 건설사들이 시공 과정부터 철저히 노력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감리를 강화해야 함.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화재, 지진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내진 설계 기준 등을 강화하고 철저히 지키도록 점검해야 함. 또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책임감을 가지도록 부실시공 벌점제를 강화해야 함. 최근 국회에서 부실벌점이 누적된 기업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보증금의 출자·용자를 제한하는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 시행될 예정임.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도 강화될 것임. 분쟁 발생시 건설사의 하자 책임기간을 연장하고 적정시공기간을 보장하는 등 국가 정책에 따른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음.
- [평가] 부실시공 방지책으로 시공과정부터 살펴야 한다는 인식은 의미 있음. 아울러 감리강화 및 각종 법규를 철저히 지키도록 점검해야 한다는 의지도 의미 있음. 아울러 부실시공 벌점제, 부실업체에 대한 선분양제한, 주택도시보증금 제한 등에 대한 의지도 보이고 있음. 다만 제시한 부실시공 대책은 국가정책으로 강원도만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재함.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벌점제 도입이나 입찰제한 등은 이미 조례를 제정, 운용중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음. 내진설계 강화는 시,지자체가 아닌 국토부의 건축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

■ 정창수 후보

- [정책] 답변 없음.
- [평가] 부실시공 방지는 안전 최우선(First)과 직결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단체장 출마자의 자세로 부적절함.

③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 대책과 방안

■ 최문순 후보

○ [정책] 강원도는 낙후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상권이 형성되어야 할 수요가 존재함. 그럼과 동시에 홍대나 압구정 등 일부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해야 할 과제도 생길 것임. 강원도의 경우, 춘천, 원주 등지에 젊은 상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카페 등 소규모 매장이 인기를 끌면서 맛집과 문화의 거리로 거듭나고 있음. 하지만 상권이 형성되고 임대료로 지역이 들쭉거리기 시작하면 전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형 상업 자본에 흡수되거나 다시 상권이 축소될 위기에 처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와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그리고 이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도시재생의 의견이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지역경제공동체의 유지와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해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 대책이 필요함. 강원도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상권 안정화와 지역공동체 간의 상생 방안을 도모할 것임.

○ [평가] 도시재생사업과정에서 주민협의체의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에 반영.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등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제시함.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화방안 마련은 시의 적절함.

■ 정창수 후보

○ [정책] 답변 없음.

○ [평가] 도민들에게 정책적 입장을 제시해야 함.

5) 강원 지역 현안

① 동계올림픽 이후 경기장 활용방안 및 가리왕산 복원계획

■ 최문순 후보

○ **[정책]** 현재 가리왕산은 생태복원 기본계획 확정(생태복원추진단 제12차 회의, '17.12.8)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18.1.26)를 거쳐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로부터 복원 목표 설정 명확화, 모니터링 구역 확대, 재해방지대책 보완 등의 기본계획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상태임('18.3.23) 가리왕산은 1,900여 억원을 들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스키장을 조성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과피 논란이 있었음. 국가적 행사인 올림픽은 올림픽대로 치르는 대신 환경과피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생태적 복원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계획 확정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기 조성된 시설들의 활용도 문제가 지역에서 논란이 되는 바, 복원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3년 동안 복원계획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활용하자는 의견이 지역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해 강원도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복원과 활용의 조화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이 절실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즉, 당초에 제출한 복원계획(56%)대로 추진 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임도를 별도로 내야 되는 등 추가 환경과피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환경단체, 환경부, 산림청 등과 지혜를 모아 복원 계획을 확정하는 동안 2021동계아시안게임과 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로 스키장을 활용하고, 사계절 리조트, 국내·외 선수들 전지훈련장 활용 등 지역주민과 체육계의 요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사후 활용 방안을 잡되, 최대한 생태친화적 방향으로 사후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평가]** ○ 가리왕산의 경우, 환경과피가 심각해지고, 동계 올림픽 이후 복원과 관리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들 의견을 무시해 왔음. 현재 환경과피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후보자 스스로 밝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임. 강원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나 책임회피성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고 있음. 정부에 제출한 복원계획역시 부실하여 보완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복원을 위한 예산 배정 역시 형편없는 수준에 충분한 재정 확보도 어려운 것이 현실. 이제 와서 천문학적 비용 소요, 복원 과정에서의 추가 환경과피, 일각에서의 활용 요구 등을 이유로 복원 약속을 스스로 흔들고 있음. 사업추진 과정에서 무리한 건설 강행을 했다는 지적이 있어왔기에 이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도민 앞에 인정하고 사과하는 자세 필요. 만약 활용을 우선 시 하여 스키장으로 운영하려 한다면 반드시 특혜의혹이 따라올 수밖에 없음.

■ 정창수 후보

- [정책] 올림픽 유산을 최대한 활용해 관광수입을 끌어올려야 함.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하나의 관광청이 올림픽 시설 유지·보완을 맡고 이를 토대로 4계절 유명 관광지로 만들어야 함
- [평가] 일반적인 의견이고 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답변이며, 개발일변도의 답변임.

② 강원도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 최문순 후보

- [정책] 강원도 전체 예산은 약 5조원 안팎임. 올림픽을 치르면서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빚을 갚아왔음. 그런 가운데 올림픽이 역대 최고의 성공으로 끝나고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강원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첫째, 시스템화, 전산화, 불요불급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연 5%정도의 도 세출예산 절감이 가능하며, 둘째, 남북관계 개선, 올림픽 계기 SOC 발달, 신산업발전 등을 통해 연 7%정도의 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더불어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강원도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국비 확보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임.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평가]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하고 빚을 갚아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증빙 내용 없음. 올림픽 성공개최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는데, 구체적인 후속 정책도 없이 말 그대로 기대에 불과함. 시스템화 전산화를 통해 세출 절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알펜시아 문제, 가리왕산 복원 문제, 경기장 사후 활용 문제 등등 재정 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강원도가 자체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 여기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부실화 할 경우 또다시 수천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임. 그럼에도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재정 확충을 이야기 하는 것은 도민이 느끼는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정창수 후보

○ [정책] 답변 없음.

○ [평가] 도민들에게 강원도 재정건정성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임.

③ 춘천 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입장과 대안

■ 최문순 후보

○ [정책] 레고랜드 사업은 사업 대상지인 중도에서 다량의 문화재가 출토돼 정부 및 문화재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문화재 보존방안을 협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림. 2017년 10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기반이 갖춰졌고, 초대 레고랜드개발주식회사(LLD) 경영진의 부패와 부실 운영으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에도 성공해 사업구조도 완전히 정상화되었음. 또한, 유일한 냉전의 땅이었던 한반도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는 등 코리아 리스크가 급속도로 제거되고, 도민들의 합심 노력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사상 최고의 성공을 거두는 등 강원도의 사업 수행 능력이 검증됨에 따라 그 동안 투자할 시기만을 저울질해 오던 멀린사가 강원도와의 합의를 체결하는 등 직접 투자 의향을 공개적·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음. 멀린사는 앞으로 구체적인 재원투자 규모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해 강원도와 이른 시간 안에 합의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음. 2020년에는 춘천 중도에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들어서 춘천과 강원도 경제 발전의 한 축을 이끌게 될 것임.

○ [평가] 사업구조가 완전히 정상화되었다고 답변한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임. 강원 도민들에게 지난 7년간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투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음. 남북정상회담과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등으로 투자 의향이 높아졌다는 것만 밝히고 있는 실정임. 2017년 10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기반이 갖추어 졌다는 답변은 명백한 허위.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에 대한 조건부 사업 승인은 이미 2016년 이전에 있었고 이에 따라 춘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통과 하였으며, 2016년도 6월과 9월에 테마파크 부지에 대한 사업 시작이 가능하다는 문화재청의 공문을 받은 바 있음. 게다가 2017년 10월 이전에도 강원도는 수차례의 착공식을 진행하며 사업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왔음. 이제와 문화재 문제로 지연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임. 오히려 사업성 악화로 인한 투자유치 실패가 보다 정확한 이유임. 이로 인해 본 공사 시공사가 수차례 포기, 교체 되는 등 지연되어 온 것임. 멀린

사는 2016년 8월 이사회에서 시설설치 1,000억원, 특수목적법인 출자 100억원, 레고호텔 550억원 등 총 1,65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음. 그러나 테마파크 부지 조성비용 1,500억원의 추가 투자는 재정 상황으로 부결하였음. (테마파크 건설을 위해서는 부지조성 사업이 선행되어야 함.) 선거를 앞두고 최근 멀린사의 야콥슨 사장이 방한하여 강원도와 합의를 체결, 강원도는 이것이 멀린사의 직접 투자(부지조성 기반공사를 위한) 약속처럼 이야기 하였지만 실제 멀린사 이사회를 거친 사항이 아니며, 협약서 영문본도 투자유치를 위해 협력한다고 되어있지 책임지고 투자한다는 내용도, 금액도 확실하게 표기된 것이 없음. 선거를 앞두고 사업 부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여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하고 있는 나쁜 답변임

■ 정창수 후보

- [정책]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정상적인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함. 3차례에 걸친 착공식 등 절차, 계약상 문제가 큼. 멀린사와의 계약상 문제, 엘엘개발 비리, 시설 및 주차장 부지 매매 부적합, 문화재 관리 부족, 도와 시행사의 사업추진 능력 부족 등을 검토해서 정상 추진 되도록 하겠음
- [평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혁신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절차상 계약상 문제 정상화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있음. 사업 전과정에 대한 검토 후 정상적인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사업추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 됨.

④ 미시령 터널에 대한 대책

■ 최문순 후보

- [정책] 현재 미시령터널은 협약대비 통행량 50% 수준 가정 시 '36년까지 MRG 약 2,366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17. 발생분 포함)되고 있음. 이는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전임 도정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보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미시령 터널 도민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터널 운영 주체인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선순위 금리를 9%에서 4%로 인하하고, 44번 국도를 힐링과 낭만의 도로로 만들어 통행량을 늘리는 등의 사업 재구조화 조치가 필요함. 궁극적으로는 교통량 수요

재조사 실시를 전제로 공익처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단, 공익처분 시 보상액과 향후 들어갈 MRG 간에 비교를 통한 실익 분석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임.

- [평가] 미시령 터널 MRG로 인한 도의 재정 부담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상당히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미시령 터널의 수익성 악화와 MRG로 인한 강원도 재정 부담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추진 시부터 제기되어온 문제로 관련 대책은 사실 이전 임기부터 추진했어야 하는 사항임. 미시령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재정부담 해소대책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금리인하(9%→4%) 및 사업재구조화를 제시하고 있음. 아울러 교통수요 재조사하여 공익처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하지만 현재 미시령민자터널 재정부담 발생은 주무관청인 강원도가 협약을 잘못 체결한 근원적 책임이 있음. 그런데 제시된 방안은 강원도의 잘못을 숨기고 국민연금공단에 잘못있는 것처럼 금리인하를 공약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함. 강원도의 근원적 책임을 국민연금공단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가뜰이나 고갈 우려가 있는 국민연금을 부실화시키고 전국민에게 피해를 분산시키는 강원도만의 매우 잘못된 이기적 의견임.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금리인하는 결코 개혁적이지 않으며, 사업을 잘못 추진한 강원도가 모든 책임을 스스로 해소하는 결자해지가 필요함. 그런데 강원도의 깊은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없이 국민연금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큰 잘못임. 공익처분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지만, 강원도(민)의 자업자득이므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함. 이를 위하여 로드맵계획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국민연금(공단)에게로 부담을 손쉽게 전가시키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안임.

■ 정창수 후보

- [정책] 금리 인하 협상을 기본으로 하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공단이 통행료를 내려 통행량을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
- [평가] 통행료를 인하하여 통행량을 늘려가겠다는 것으로 해당 질의의 종합적인 답변이 되기 어려움. 단지 지분을 인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인데, 마치 공단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여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함. 또한 강원도의 잘못된 사업추진을 국민연금이 고통 분담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도 제시되지 않음. 통행료 인하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잘못 추진하여 엄청난 재정을 낭비시킨 강원도의 철저한 반성이 가장 시급함.